

기자간담회 모두발언(2023.1.13일)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25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오늘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지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으며 유로지역은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역성장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은 예상보다 빨리 방역정책을 완화하였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을 지속하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12월 FOMC에서 정책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대체로 완화되었습니다.
- 국내 경기는 성장세 둔화를 지속하였습니다. 주요국과 IT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큰 폭 감소하였고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크게 늘어났던 수요가 점차 둔화되고 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 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과 IT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와 주요국의 경기 둔화 정도와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월에도 5.0%의 높은 수

준을 나타냈습니다. 석유류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2월에 4.1%로 소폭 하락하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8%로 둔화되었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상승 압력이 공공요금, 가공식품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1~2월중에는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으로는 11월 전망치 3.6%에 대체로 부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에 힘입어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와 CP 스프레드가 상당폭 축소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중반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비우량채권, PF-ABCP 등에 대한 금융시장의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고, 향후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위안화, 엔화 움직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금융권 가계대출은 금리 상승,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

3.25%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3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금년중에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